

---

- 해양쓰레기 순발생량 네거티브 전환을 위한 -

#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

---

2023. 4. 20.



해양수산부

# 순 서

I. 추진 배경 .....	3
II. 해양쓰레기 발생 현황 및 문제점 .....	4
III. 추진 전략 .....	7
IV. 세부 추진과제 .....	8
1. 공간별 상시 수거체계 강화 .....	8
2. 관리 사각지대 일제수거 .....	10
3. 인프라 확충 및 재활용 체계 구축 .....	12
4. 발생원 관리 및 거버넌스 활성화 .....	13
V.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.....	14

## I. 추진 배경

### □ 코로나19 이후 해양쓰레기 급증에 따른 해양오염 우려

-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 수요 회복\*으로 주요 관광지 해수욕장\*\* 등 국내·외 방문객이 늘면서 해안가 방치 쓰레기 관리 필요성 증가

\* 설문조사 결과, 응답자의 97.2가 국내여행 의사 있음('21.12, 한국관광공사)

\*\* 해수욕장 이용객 수(만명) : ('20) 2,270 → ('22) 3,983 (+75%)

-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포장재, 일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도 지속 증가\*

\* 생활폐기물 내 플라스틱류 1일 배출량(톤/일) : ('19) 7,020 → ('21) 7,973 (+13%)

### □ 해양쓰레기는 육상쓰레기와 비교시 수거 난이도와 비용 막대

- 해류를 따라 이동하는 해양쓰레기 특성상 현황 파악이 어렵고, 긴 해안선, 해저 등 분포 면적과 범위가 넓어 탐지·수거에 한계
- 염분, 이물질(빨, 유기물 등)이 포함되어 있어 취급업체가 적고, 운반·처리 등 추가 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해 평균 처리 비용 높음\*

\* 평균 폐기물 수거·처리 단가: 육상 21만원/톤, 해안 40만원/톤, 침적 220만원/톤

### □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 대비 투자 부족

- 해양생태계 영향\*, 관광·수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\*\* 등 피해 다양

\* 국내 연안 바다거북 사체 부검 결과, 34마리 중 28마리(82%) 플라스틱 섭식 확인('22)

\*\* 국내 유령어업 피해: 연간 약 4천억원('21) / 선박 부유물 감김 사고 : 연평균 300여건('19)

- 해양 내 미세 플라스틱 농도는 증가\*하고 있으나, 생물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아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

\* 태평양 미세플라스틱 농도: ('16년) 250mg/m<sup>3</sup> → ('60년) 1,000mg/m<sup>3</sup> 초과 예측

## II. 해양쓰레기 현황 및 문제점

### 1

### 해양폐기물 현황 및 관리체계

#### □ 연간 해양 쓰레기 발생량 약 14.5만톤, 평균 11.8만톤 수거

- (발생량) 연간 14.5만톤으로 육상기인 65%(9.5만톤), 해상기인 35%(5만톤)
  - 육상기인 9.5만톤 중 홍수기 초목류 64%, 하천 유입 27.5% 순
  - 해상기인 5만톤 중 폐어구 75%, 양식장 유입 12.9% 순
- (수거량) 최근 5년간 연평균 11.8만톤\* 수거, '22년 수거량은 12.6만톤 (해안가 9.7만톤, 부유 0.6만톤, 침적 2.2만톤)
  - \* 수거량(만톤) : ('18) 9.5 → ('19) 10.8 → ('20) 13.8 → ('21) 12 → ('22) 12.6
- (현존량) 총 15.7만톤 추정('18), 침적 11.5만톤(73%), 해안가 3.8만톤 (24%), 부유 쓰레기 0.4만톤(3%) 순

#### □ 공간별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주체 다원화

- 공간 분포에 따라 해안가·부유·침적쓰레기로 구분되며, 해안가 쓰레기는 지자체가, 부유·침적쓰레기는 해역관리청\*에서 수거·처리

\* 영해, 내수: 지자체 / EEZ, 국가어항, 무역항, 연안항, 환경관리해역: 국가(지방청)

#### < 공간별 수거 주체 및 수거 현황 ('22) >

구 분		주 체	수거량 (톤)	수거 예산 (백만원)	
해안가		지자체	96,287	국비 + 지방비	29,514 (국비보조)
부유	영해		15,175		37,447 (지방비)
침적	EEZ, 국가어항, 무역항, 어장 등	국가	14,573	국비	56,649
합 계			126,035	123,610	

### □ 해양폐기물 중장기 관리기반을 구축하였으나,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

-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 시행(‘20.4), 기본계획 수립(‘21.5)으로 해양폐기물 중장기 관리기반 구축
  - 단순 수거 위주 정책에서 발생 예방 대책을 포함 전주기 관리체제로 전환
    - \* 해양폐기물 전체 예산은 증가, 수거·처리 사업비 비중은 축소(‘19. 77% → ‘23. 53%)
- 다만, 계절적 특성에 따라 쓰레기가 집중 발생하는 해안가 및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 등의 해양쓰레기 문제 상존
  - 사각지역에 방치되는 해양 쓰레기에 대한 민원 및 언론 보도\* 증가
    - \* "낙동강 하구 절대보전 무인도서, 쓰레기장 된 '페이퍼 파크'"('22.5.10. MBC)
- 또한, 관련기관 상호 협력체계\*가 느슨하여 발생원별 통합적 관리 한계
  - \* 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(‘21) 등 출범하였으나 실질적 정책 연계 미흡

### □ 재활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지만, 재활용률은 아직 10% 미만

- 「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」 시행(‘19.5)을 통하여 어구 보증금제 등 발생원별 저감 대책 및 재활용 활성화 기반 조성
  -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착수(‘20) 등 처리·재활용 기반시설 도입, 폐어구·부표 관리를 위한 「수산업법」 전부개정 등 법·제도 정비(‘22)
- 다만, 해양쓰레기의 복잡한 집하·운반·처리 방식에 비해 관련 인프라\* 및 재활용 체계 미흡으로 재활용률은 여전히 10% 미만
  - \* 해양폐기물 선상·육상 집하장은 현재 770개소로, 전국 어항(1,034개소) 대비 0.7개 수준이며, 재활용 원료를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역별 재활용 집하장은 전무한 실정
- 어구 보증금제 도입(‘24) 등 예방 정책의 효과 발생까지는 정책시차 존재
- 최근, 코로나 시기 포장재, 위생용품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며 생활 플라스틱 폐기물의 해양 유출 우려 심화

## 관리 취약 해양쓰레기 유형

### ▷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

- 주요 관광지 **행락철 이용객 급증**에 따른  
해수욕장 쓰레기 적기 처리 곤란으로  
경관 저해 및 민원 발생



### ▷ 무인도서 및 소규모 유인도서

- (무인도서) 발생 실태 파악도 어렵고, 해양쓰레기가  
수거되지 않은 채 **지속 방치**되어 해양오염 유발
- (유인도서) **인력, 장비 부족**으로 정기적 수거가 어렵고,  
집하·처리 시설 미비로 육지 반출 선박이 올 때까지  
방치되거나, 집중호우시 **해양으로 재유입**



### ▷ 접근 곤란 해안가

- 갯바위, 해안 절벽, 얇은 수심 해역 등 수거 선박  
운용이 어려운 지역은 사각지대로 존재
- 테트라포드 설치 구역은 안전사고 위험으로 접근이  
어렵고, 출입이 통제되어 **인력으로 수거에 한계**



### ▷ 연근해 어장

- 어구가 설치된 연안 및 양식어장은 **폐어구·부표**로  
인한 해양쓰레기 발생 가능성이 높으나,  
상시 조업구역으로 수거에 **애로**



### Ⅲ. 추진 전략

#### 비전

해양쓰레기 제로화로 청정한 바다 실현

#### 방향

- 사전·대규모 일제 수거로 해양쓰레기 획기적 감소
- 발생 예방 및 수거·처리 인프라 구축

#### 목표

발생 대비 수거량 확대로 **해양쓰레기 네거티브** [순발생량<0] 전환

\* (연 발생량 14.5만톤) - (24년 예상수거량 15.5만 톤) ⇒ 매년 현존량 1만톤 저감

\*\* '27년까지 해양쓰레기 현존량 최소 4만톤 감소

#### 추진 전략

##### 전략 1

공간별  
상시 수거체계 강화

##### 전략 2

관리 사각지대 일제수거

##### 전략 3

인프라 확충 및  
재활용 체계 구축

##### 전략 4

발생원 관리 및  
거버넌스 활성화

#### 추진 과제

- ① 관광지 등 해안가 상시수거
- ② 부유 쓰레기 신속 대응
- ③ 침적 오염물질 수거 확대
- ④ 민간 상시협력 체계 구축

- ① 무인도서 관리·정화 강화
- ② 소규모 유인도서 관리
- ③ 방치폐기물 일제수거
- ④ 군·경 합동 사각지대 일제수거

- ① 수거·집하 인프라 확충
- ②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

- ① 해상 발생원 차단
- ② 하천 유입 쓰레기 차단
- ③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

## IV. 세부 추진과제

### 전략 1 공간별 상시 수거체계 강화

#### 1 관광지 등 해안가 상시수거

- **(현황)** 행락철 주요 관광지 해수욕장 및 인근 해변에 쓰레기 증가로 경관을 저해하고 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\*
  - \* 해안가 발견 쓰레기의 80%가 집중되어 있는 취약범위는 3,600km로 조사(전체 약 25%)
- 또한, 해수욕장 사이에 있는 해변 역시 인파가 몰리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하여 관광객 및 지역 민원 증가
- **(개선)** 해안쓰레기 전담 상시수거 인력(바다환경지킴이)을 활용하여 쓰레기 유입 취약해안 전 범위에 대한 수거 강화('23년 1,200명)
  - 지자체의 적극적 수거 유도를 위해 해수욕장 평가시 해양쓰레기 관련 항목을 중점 평가('23)하고, 인근 해변에 바다환경지킴이 집중 투입('23~)
  - 또한, 안전신문고 내 해양쓰레기 신고 메뉴를 적극 홍보\*하여 시민들 신고를 통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및 수거 확대
  - \* '22년 5월 개설 이후 연간 접수 건수 1,488건으로, 개설 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

#### 2 부유 쓰레기 신속 대응

- **(현황)** 매년 태풍·집중호우로 단기간에 대량 유입되는 재해쓰레기 문제가 반복\*되나 일시에 대량 수거되지 못하여 인근 해역 오염 확산
  - \* 최근 5년간 재해쓰레기 8.3만톤 발생 ('22년 태풍 힌남노 내습시 해양쓰레기 9천톤)
- **(개선)** 일시 대량 수거가 가능한 항만 청소선\*(청항선)을 활용하여 부유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고,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추진
  - \* 총 22척 운용 중(일반 19척, LNG 3척)이며, 수요 증가 지역 추가 건조 필요성 검토
- 특히, 태풍·집중호우 내습 기간(7~8월)에는 수거 장비·인력을 우심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투입하고, 지자체 수거·처리비용 지원\*
- \*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지원사업(국비 50%)



## 3

## 침적 오염물질 수거 확대

- **(현황)** 도시 주변해역 및 항만 구역 등은 육상에서 오염물질 유입이 지속되어 퇴적물 오염에 따른 악취 등 민원 발생
  - 선박 방충재로 사용되다가 떨어진 페타이어가 바닷속에 침적되어 미세 플라스틱화 되는 등 해양생태계 등 2차 오염 가속화\*
  - \* “부산 항만 바닷속 페타이어 수백 톤 쌓여 있었다”(22.6.10. SBS등)
- **(개선)** 중금속 등으로 해저퇴적물이 오염된 해역을 대상 정화 사업을 확대(‘23. 1개소 → ‘24. 3개소)하여 오염 Zero 항만으로 전환
  - 아울러, 항만·어항 침적 페타이어 수거\*를 확대하고, 발생 예방을 위해 방충재 실명제 도입 및 선박 재활용 방법에서 제외 방안 검토
  - \* 부산항 시범 수거사업 확대(‘22년 봉래동·청학동 → ‘23년 5개 항만 9개소)
  - 연근해 어장에 유실·침적된 어구 수거 지속 추진(‘23년 54개소)

## 4

## 민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

- **(현황)** 상시 발생·이동하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·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·기업·일반국민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필요\*
  - \* 국민인식 조사(‘22) 결과, 일반국민의 해양폐기물 수거 봉사 참여의향은 높은 편(70.2%)
- **(개선)** 민간의 자발적 수거 문화 확산을 위한 전국민 홍보캠페인 추진 및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참여 확대 유도
  - (기업 ESG 연계) 해양환경 분야 ESG 활성화와 연계된 협력 모델\*을 발굴하고, 민간기업의 해양쓰레기 분야 참여 및 투자 활성화 추진
  - \* 오염지역 인근 기업 대상 침적 해양쓰레기 수거, 해양폐기물 재활용 공모전홍보, 반려해변 확산 등
  - (클라우드 펀딩) 해양환경에 관심 있는 일반국민 대상으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해양쓰레기 수거·재활용 등 추진 방안 마련(‘23)

## 전략 2 관리 사각지대 일제수거

### 1 무인도서 관리·정화 강화

- **(현황)** 무인도서의 경우 용도구역별\*, 소유자별\*\* 관리주체가 다양하고 접근이 어려워, 신속한 분포 현황 파악과 적시 수거·처리가 어려움

\* 군사시설보호구역(국방부), 문화재보호구역(문화부), 국립공원(환경부) 등 개별법에 따라 지정

\*\* 단일 소유 기준으로 국유(46.7%, 산림청·기재부 등 관리청 다양), 사유(40.9%)

- 도서 지역 등에 방치된 쓰레기는 일제 수거되지 않으면 해류 등의 영향으로 다른 도서, 해안가로 쉽게 재유입되어 수거 효과 미비

- **(개선)** 보전 가치가 있으면서 오염이 심각한 무인도서를 집중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선정\*하여 단계별 일제수거 추진

\* '23년 10개 도서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검토

- 무인도서 전수 실태조사(~'27)를 통해 도서별 쓰레기 관리체계 마련

### 2 소규모 유인도서 관리

- **(현황)** 소규모 유인도서 관리주체는 지자체이나, 인구 밀집지역인 육지 해안가에 사업이 집중되어 신속 수거 및 처리 어려움

\* 도서쓰레기 관리실태 조사 결과('19), 도서 내 처리시설 및 수거 예산·인력 미비로 대부분 주민 인력 활용 비정기적 수거 및 방치 중

- **(개선)** 도서지역 적시 수거체계를 구축을 위해 지자체 맞춤형 도서 지역 정화운반선 건조 지원('23년까지 7척 건조)

- 도서 및 어촌 맞춤형 처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시 반출이 어려운 도서 지역 내 친환경 해양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시스템\* 조성 추진\*\*

\* 해양폐기물 전처리 후 소각·가스화 과정을 거쳐 폐열 회수 및 전기에너지 생산·공급

\*\* '24년까지 기술개발 및 실증(R&D) 이후 표준 보급모델 보급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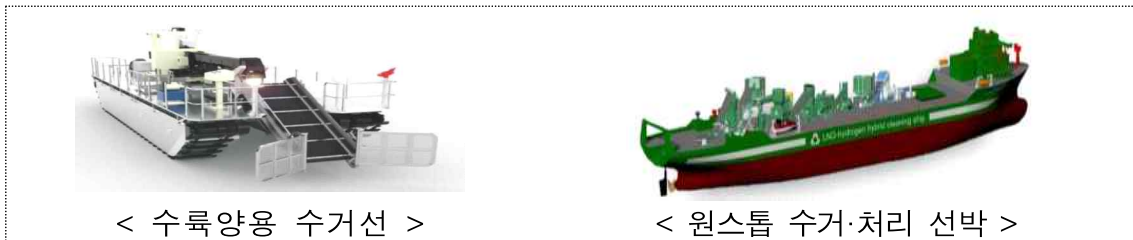
### 3 방치 폐기물 일제수거

- **(현황)** 테트라포드(TTP), 해안가 절벽 등 접근이 어려운 해안 쓰레기는 관리가 어려워 처리되지 못하고 경관 저해, 악취 등 유발
  - 또한, 어구가 설치된 연안 및 양식어장은 침적된 폐어구로 인한 피해\*가 크나, 상시 조업 지역으로 수거 애로

\* 해경 신고 부유물 감김 사고의 28%가 어장(양식장) 인근 1km 이내에서 발생

- **(개선)** TTP 등 수거 사각지대, 주요 관광지 해변 등에 무단 투기되거나 방치된 쓰레기에 대한 일제수거 실시
  - 방치쓰레기 수거 사업 추진하고, 접근 곤란 해안 수거용 장비를 개발\*(~'24)하여 사각지대 수거 효율 향상

\* △테트라포드 수거 장비를 탑재한 수륙양용 수거선 △부유쓰레기 해상 원스톱 수거처리 선박



- 어장 내 침적 폐기물 집중 수거를 위하여 일정기간 특정 구역의 조업을 중단하고 수중에 설치한 어구를 일제 회수('23년 2개소 → '24년 3개소)

### 4 군경 합동 사각지대 일제수거

- **(현황)**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해수부-해군-해경 공조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'19년부터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동 수거 등 협력 추진 중
  - 한정된 구역 중심으로 추진되어 군·경 여유 장비 및 인력을 활용한 협력 확대 모색 필요

- **(개선)** 서해5도 및 군부대 배치 도서지역 등 쓰레기 수거 사각지대에 해군·해경 합정 및 해수부 관공선을 활용하여 일제 수거활동\* 실시

\* 각 지방청 주관 연안정화의 날 행사 등을 확대하여 필요시 해군 및 해경도 참여

## 전략 3 인프라 확충 및 재활용 체계 구축

### 1 수거·집하 인프라 확충

- **(현황)** 해양쓰레기는 운반·처리가 어려워 간이부두 또는 해안가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, 대량 집적할 수 있는 집하장은 전무
- **(개선)** 전국 주요 어항에 해양쓰레기 현장 집하장 확충·정비
  - 현장 집하장을 지속 확충('23년 30개소, 누적 800개소)하고, 집하장 성격별(일반, 어구전용, 전처리 병행 등) 분리 체계 확립
  - 불규칙적으로 소량 발생하는 해양폐기물을 연중 균일하게 재활용 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스마트 집하장 신규 설치\*

\* '23년 2개소 설치(부산·목포) 후 단계적 확대 검토



< 현장 집하장 (선상, 육상) >



< 중간 집하장 >

### 2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

- **(현황)** 해양폐기물 재활용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배출 체계 및 인식이 부족하여 균일한 고품질 원료 공급 곤란
  - 해양폐기물 재활용 산업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또한 전무한 실정
- **(개선)** 분리배출 체계 정착, 사업여건 개선 등을 통해 재활용 산업 지원육성
  - (분리배출 정착) 육상·선상집하장(1차) 단계부터 분리배출이 가능하도록 바다환경지킴이의 분리배출 지도·관리
  - (산업지원) 재활용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해양폐기물 재활용제품 인증제를 도입\*('23)하고, 인증마크를 특화하여 판로 확보 지원

\* 우수재활용 제품에 대한 국가인증(GR 인증, Good Recycled Certification) 연계

- (기술개발) 해양폐기물의 재활용 원료화 및 관리시스템 개발, 해양 폐기물 특성별(고오염 로프, 폐어망 등) 맞춤형 재활용 기술개발 검토

## 전략 4 발생원 집중 관리 및 거버넌스 활성화

### 1 해상 발생원 차단

- **(현황)**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54%가 폐어구·부표 등 어업활동에서 기인하나, 어구 폐기에 대한 규제나 어구 회수 유인수단 부재
  - 또한, 양식장의 스티로폼 재질 부표는 미세플라스틱 주요 발생원\*
- \* 우리나라 남해 5개 해역에서 채취한 해수의 미세플라스틱 밀도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(KIOST)
- **(개선)** 어구·부표의 전주기 관리 강화를 통해 해양 유실·투기량 저감
  - (어구보증금제) 어구 구매시 보증금을 부과하고 반납시 반환하는 어구 보증금제\*를 시행('24)하여 폐어구 회수 촉진
  - \* 어구보증금센터 설립 및 보증금지급관리시스템 구축('23), 통발어구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대 추진
  - (대체소재 보급) 모든 양식장 내 스티로폼 부표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('23.11~), 인증부표 보급 확대 및 페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 추진

### 2 하천 유입쓰레기 차단

- **(현황)** 육상쓰레기가 해양에 유입된 이후에는 수거 난이도와 비용이 상승하나, 하천·하구 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현저히 부족
- **(개선)** 환경부와 협조하여 지천 중심으로 하천폐기물 유입차단막\* 설치를 확대하고, 댐, 저수지 등에 대한 수면쓰레기 수거장비 보강
- \* 환경부 지원 또는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현재 134개소 운영 중

### 3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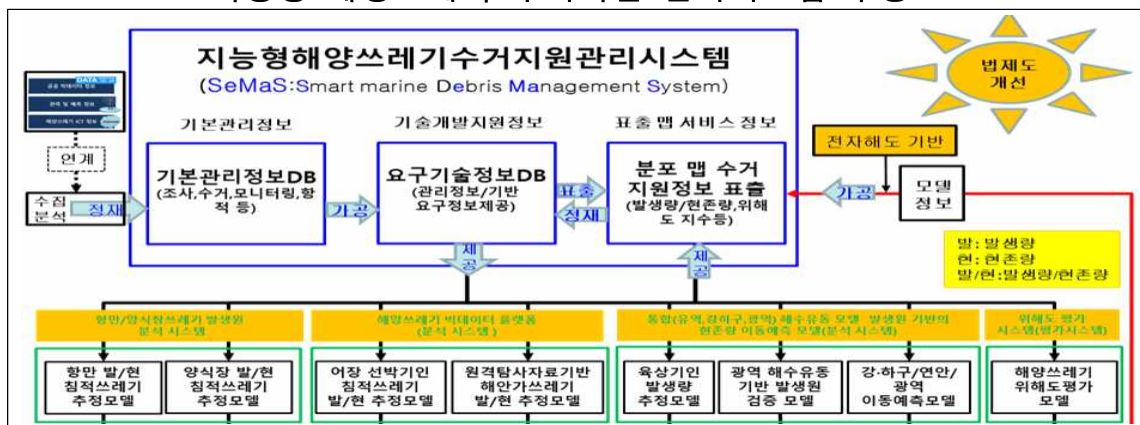
- **(현황)** 다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출범('21)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, 부처별 추진현황 공유에 그치고 실질적 정책 연계 미흡
- **(개선)**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안전 발굴 및 철저한 과제 관리를 통해 해양쓰레기 정책 연계\* 활성화(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등)
- \* 육상 폐기물 관리(환경부), 미세 플라스틱(환경부식약처 등), 해양 플라스틱 국제협력(외교부) 등
- 해양쓰레기의 특성상 지역적 경계를 넘어 정책 관리가 가능한 광역 해양환경관리기구 설치 등 중장기 협력방안도 마련

## V.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

### 1 향후 계획

- (3개년 일제 후속 수거대책 마련) 드론,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해양쓰레기 분포지도 작성(~'24)과 연계하여,
  -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정책효과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부·기업·민간 역량을 총동원한 3개년 일제수거 후속대책 수립('24)

< 지능형 해양쓰레기 수거지원 관리시스템 구성도 >



- (원인자 부담원칙 확립) 대규모 일제수거 후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통해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, 주기적(3~4년) 일제수거 체계로 전환

### 2 기대 효과

- 발생량 대비 수거량 증가로 **‘해양쓰레기 네거티브’ 전환**
  - 매년 미관리, 유실 및 무단 투기로 해양 유입 쓰레기보다 많은 양을 수거하여 **현존량**(해양환경 내 잔존 해양쓰레기 양) **감소\*** (순발생량<0)
  - \* 향후 어구보조금제 도입 등 발생 저감 효과가 나타나면 저감 폭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
- Post-코로나 **관광 유발 효과 기여 및 수산업 등 경제적 비용 예방**
  - 코로나19 이후 회복된 국내 관광 수요에 대비하여 깨끗한 해변 조성으로 **해양 관광 활성화에 기여\***하고, 수산업 피해 등 **경제적 비용 절감\*\***
  - \* 2011년 낙동강 홍수기 거제도 관광피해 419억원 추산 \*\* 유령어업 피해 연 4,037억원 추정
- 해양쓰레기 **고부가가치 재활용률 제고 및 2050 탄소중립 이행**
  - 재활용 활성화 기반 조성으로 現 10% 미만으로 추정되는 물질재활용률을 ‘27년까지 **20% 이상**으로 확대, 폐기물 처리 온실가스 감축 기여



추진 과제	세부 과제 및 일정	소관 부처
<b>1. 공간별 상시 수거체계 강화</b>		
① 관광지 등 해안가 상시수거	·바다환경지킴이 운영('23~)	해수부
	·해수욕장 평가 항목 개선('23~)	해수부
	·해양쓰레기 안전신문고 활성화('23~)	해수부, 행안부
② 부유 쓰레기 신속대응	·청항선 신규 및 대체 건조 검토('23)	해수부
	·청항선 등 활용 재해쓰레기 수거 지원 확대('23~)	해수부, 해경청
③ 항만 오염물질 수거 확대	·해저퇴적물 정화해역 확대('23~)	해수부
	·항만·어항 침적 페타이어 수거사업 확대('23) 및 방충재 실명제 도입('24)	해수부
④ 수거 주체 다양화	·범국민 신고·저감의식 증진 '알줍 캠페인' 추진('23)	해수부, 해경청
	·반려 해변 사업 전국 연안 지자체로 확대('23)	해수부
<b>2. 관리 사각지대 일제수거</b>		
① 무인도서 관리·정화 강화	·무인도서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및 수거('23~)	해수부
	·해양쓰레기 분포지도 작성('24)	해수부
② 소규모 유인도서 관리	·도서지역 정화운반선 건조('23)	해수부
	·도서어촌 해양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시스템 개발·보급('25)	해수부
③ 방치폐기물 일제수거	·연안 방치쓰레기 일제수거('23)	해수부
	·접근곤란 해역 수거장비 기술개발(~'24)	해수부
	·어구 일제회수('23~) 및 연근해 어장 침적어구 수거	해수부
④ 군·경 합동 사각지대 일제수거	·해수부·해군·해경 합동 수거·정화활동 실시('23)	해수부, 국방부, 해경청
	·연안정화의날 참여범위 확대('23~)	해수부
<b>3. 적정 처리 및 재활용 체계 구축</b>		
① 수거·집하 인프라 확충	·현장 집하장 확대('23)	해수부
	·스마트집하장 시범사업('23)	해수부
② 해양폐기물 재활용 활성화	·어민주도 분리배출·재활용 시범사업 확대('23)	해수부, 해경청
	·해양폐기물 재활용 인증제 도입 및 로고 개발·활용('23)	해수부, 산업부
	·해양폐기물 재활용 원료화 기술개발('24)	해수부
<b>4. 발생원 관리 및 거버넌스 활성화</b>		
① 해상 발생원 차단	·어구보증금센터 설립('23) 및 통발대상 시범사업 ('23), 어구보증금제 시행('24~)	해수부
	·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('23) 및 어구 실명제 강화('23)	해수부
	·인증부표 보급 확대('23~) 및 페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금지('23.11), 차세대 대체소재 부표 개발('23~)	해수부
	·생분해성 어구 보급 지속 확대 및 품질 강화('23)	해수부
② 하천 유입 쓰레기 차단	·유입차단막 설치 확대('23~), 수면쓰레기 수거장비 보강('23)	해수부, 환경부
	·홍수기 전·후 하천·해안가 쓰레기 집중 수거('23)	해수부, 환경부, 해경청
③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	·범부처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활성화('23)	해수부, 관계부처